

알립니다

성장의 지름길 '동행'



건설경제 '2017 건설협력증진대상' 공모

신청서 접수 '7일 마감'... 서두르세요

〈건설경제〉가 '2017년 건설협력증진대상'을 공모합니다. 지난 2005년에 처음 제정돼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 상은 건설산업 주체들의 동반성장 역할과 의지를 평가·시상하는 국내 유일한 행사로, 오는 7일까지 1차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건설협력증진대상은 서류 심사와 공개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동시에 우수한 동반성장 정책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촉진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상 기업은 건설산업의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이미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정책적 인센티브도 부여 받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제도'에서 '2점'의 가점을 부여받습니다. 상호협력평가 우수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최대 3점 및 시공능력 평가액의 6%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장관 표창을 수상한 기업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경우 벌금 '2점'의 감점 조치도 더해집니다. '아름다운 동행'의 길라잡이가 될 건설협력증진대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명 : 2017 건설협력증진대상
- 주최 : 건설경제신문, 건설외주협의회
- 후원 :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건설경제조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크레디블(credible)
- 응모 대상 :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공기업 및 종합, 전문, 일반, 전기, 정보통신업체, 건설산업 분야 협회·단체
- 응모 방식 : 자체 지원 또는 협력상대 (일반·전문건설업체) 간 추천 중 택일
- 시상 부문 :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표창, 동반성장위원장 표창,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 응모 신청 및 심사
 - 1차 신청서 접수 마감 : 2017년 7월 7일(오후 6시 마감)
 - 2차 심사서류 접수 : 2017년 7월 10일~8월 11일 (오후 6시 마감, 협력부문 제외)
 - 3차 발표 심사 : 2017년 9~10월 (공개 프레젠테이션 심사)
 - 시상식 : 2017년 11월
- 문의 : 02-3480-8446
- 공모 안내서와 응모 신청서 등 자세한 정보는 〈건설경제〉 홈페이지(www.cnews.co.kr) 배너 참고

☎ 새 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 건설 시·도 회장에게 듣는다

허승 건설 서울시회장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추진하고 있다. 개헌을 통해 지자체장들로만 구성된 '제2 국무회의' 신설도 약속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막대한 권한을 넘겨준다고 해서 지방분권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홀로서기는 재정자립이다. 그리고 재정자립의 기반은 경제와 일자리다. 지역경제일수록 건설산업의 역할이 크다. 지역 내 총생산액(GRP)에서 건설투자의 비중은 무려 15.6%다.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뜻하는 고용유발계수(10.2)는 전 산업 평균(8.2)보다 훨씬 높다. 지역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을 들어본다. 편집자

'제값 주고 제대로 시공' 문화 정착 최우선

"제값을 줘야 제대로 된 시공이 가능하고 건설산업 이미지도 함께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된 허승 선임 회장(청광종합건설 대표)은 "적정 공사비 확보가 건설산업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가 발주하는 2억~100억원 규모의 종합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의무화하고 2019년까지 직접시공비율을 10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는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시중 노인 단가 이상) 지급을 의무화했다. 이른바 '건설업 혁신 3불(不) 정책'이다.

허 회장은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를 없애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근본 원인을 찾아 바꾸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불법 하도급이 사라지고 적정 임금과 직접 시공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전기차 충전소를 예로 들었다.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충전기를 쓰면 차 한 대를 충전하는 데 15~30분이면 된다. 하지만 완속 충전기는 기기 성능에 따라 4~8시간까지 걸린다. 제대로 된 충전 인프라 없이는 전기차 보급이 어려운 이유다.

그는 "민간 아파트에는 급속 충전기가 비싸서 많이 설치 못하고 대신 완속 충전기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며 "설치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급속 충전기를 외면하면 전기차 보급이 안 되는 것처럼 적정 공사비도 예산부담이 좀 들더라도 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허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50



지역경제일수록 '건설' 역할 커 적정공사비 확보, 정상화 출발점 도시재생 뉴딜 물량 창출 기대

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오래되고 낡은 도시'인 서울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곧바로 건설공사 물량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업 추진에 장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로 건설물량 창출에 매우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년간 매년 1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500여개의 구도심 및 노후 주거지를 되살리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서울시도 지난 2월 '서울형 도시재생 신규지역'으로 17곳을 선정해 20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고, 지난달에는 새 정부의 뉴딜사업에 부응해 희망사업지 14곳을 추가 선정했다.

서울지역은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사업에서도 가장 앞서가고 있다. 건설 서울시회의 노력으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후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가 만들어졌다. 지난달에는 향후 5년간 노후 인프라 개선에 7조원대 투자계획(서울 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을 내놨다. 허 회장은 "노후시설을 시설물별로 단순 교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변시설까지 한꺼번에 교체하거나 개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1000만명이 사는 메갈로폴리스인 서울이 좀 더 즐겁고 볼거리가 많은 도시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계적인 박람회 등 다양한 컨벤션을 유치할 시설을 더 짓고 파리 에펠탑이나 뉴욕 브로드웨이처럼 창의적인 문화거리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산업이 창출돼 자연히 건설물량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는 발주물량 가뭄과 공사비 부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건설사의 수익성 약화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붕괴시키고 공공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저하로 이어져 국민들의 피해로 직결된다. 허 회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건축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새로운 형태의 개발사업에 중소건설업체들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 등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기업들도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선 기존 영업방식과 영역에서 벗어나는 끈임없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일본 건설사들은 '하자보수'란 개념을 모른다. 하자는 당연히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인식의 전환, 혁신들이 축적돼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설산업이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